

# 국비 확보전 '강원도 힘' 시험대

여당 소속 최 지사 역할 기대  
SOC사업비 확보 우선 과제  
올림픽 개최 후 사업도 중요

속보=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본지 5월13일자1면)되고 있는 가운데 국비 확보전이 대선을 통해 여당으로 전환된 최문순 지사가 여당 도지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도는 내년 국비 가운데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천-삼척고속도로 건설과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제2경춘국도건설 등 신규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사업비 (각 50억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해선 (강릉-고성 제진)철도 건설 사업비 (45억원)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200억원)도 확보해야 한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158억원)과 평화누리길 조성 (80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30억원)사업도 주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도 문제다. 도는 올림픽 개최 후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 (74억원)을 비롯해 올림픽 아라리 생태축 조성 (63억원), 정선알파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80억원), 올림픽

플라자 유산조성사업 (98억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번번히 야당 도지사로서의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으로 야당 도지사에게서 여당 도지사 상황이 급변하면서 내년 국비 확보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도출신 심기준 의원이 국회 기재위에 포진한 것을 비롯 정부·여당을 등에 업은 최문순 도정이 모처럼 국비 확보전에 힘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 확보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겪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대선결과 강원도가 여당으로 바뀌면서 내년 국비 확보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 공사비 부족·불법대여 대책 촉구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이계원 다원건설 대표)는 공사비 부족과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 관급 레미콘 공급업체의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공사비 부족 문제와 관련, 일부 발주처들이 예정가격 산정 시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토록 돼 있는 표준시장 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고의 누락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사 실행률이 125%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OO복지관 건설공사'를 예로 들면서 적정 공사비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등록 불법대여나 건축주의 위장직영 문제의 경우

건설산업의 위상 추락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레미콘 공급업체의 납기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수 공급자 지정, 건설기술자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낙찰률 상향,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은 “SOC 예산 축소, 공사비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연배상금률 감경, 주요 발주기관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